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32호 (2014-11) 발행일 : 2014. 03. 2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

정부 역할에 대한 태도를 넘어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의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할 필요

계층구조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은 것으로 판단. 소득격차·실업·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건강보장, 아동보육,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책임을 요구

근로이익의 고치는 중요한 가치로 수용되고 있으며, 한편 국민의 책임과 관련하여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1. 국민의식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자료의 설명

#### ■ 국민의식과 사회정책의 관계

○ 의식과 정책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양

- 연구자에 따라 의식이 정책을, 또는 정책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전제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음. 일부 연구자는 사회정책의 발전 수준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함

○ 하지만 국민의식이 사회정책의 발전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 선거에 근거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 의식은 각종 정책 결정이나 사회 안정 및 발전에 중요한 기반

\* 본 원고는 아래의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현주·강상경·김수완·이선우·전지현(2013).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의식」을 넘어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으로 분석 내용 확장

- 기존의 연구주제였던 복지의식은 주로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의 복지확충에 대한 지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분석되었음
- 복지의식으로 분석을 한정할 경우, 계층구조, 분배,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한 태도와 같이 사회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측면이 간과될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부가조사인 「복지의식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식을 분석

-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7차 복지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399가구, 가구원 6,248명)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5,050명이며, 기준 응답시점은 조사일인 2013년 상반기 현재임
-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계층구조와 분배에 대한 인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조세부담 등 정부·국민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정리

## 2. 계층구조와 분배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 ‘오늘날 한국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1%로 가장 많음
  - 반면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매우 낮은 상태
  - 우리사회가, 부자가 소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계층구조를 갖는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다수

〈표 1〉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현재의 한국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유형	빈도	백분율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930	22.07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 많아져 가난한 사람 많은 사회	1,741	41.31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929	22.04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437	10.37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177	4.21

- ‘한국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가 73.1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계층구조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계층구조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

〈표 2〉 바람직한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향후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유형	빈도	백분율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22	0.53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 많아져 가난한 사람 많은 사회	88	2.09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273	6.48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3,081	73.11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750	17.79

■ 소득격차와 분배에 대한 인식

○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5점 척도에서 4.02점으로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표 3〉 소득격차 및 분배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4.2	0.6	5점 척도
성장과 분배 중 분배가 중요하다	2.5	0.8	4점 척도

○ 분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2.5점으로 성장과 분배 각각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의수준이 유사하나,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

- 연령대별, 학력별 분배 중요성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3.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

〈표 4〉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

(단위: 점)

빈곤 원인으로서는 각 항목의 중요성 인식(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2	0.7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3	0.7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	0.8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3.3	0.7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3.1	0.8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7	0.8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2	0.7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8	0.8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1	0.8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	0.8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2.8	0.8

- 빈곤 원인별로 중요성 인식은 유사. 그러나 빈곤원인을 개인에 두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인의 노력 부족(3.3점) 및 개인 책임감 · 자기규율의 부족(3.3점)과 개인적인 절약과 가계관리 부족(3.2점) 등에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여건을 좀 더 강조하는 응답을 보면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빈곤 원인별 중요성 인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5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빈곤 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남

〈표 5〉 연령대별 빈곤 원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점)

빈곤 원인으로서는 각 항목의 중요성 인식 (4점 척도)	평균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3.1	3.2	3.3	3.2	3.3	3.2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3.2	3.3	3.3	3.3	3.3	3.2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2.6	2.6	2.7	2.6	2.7	2.7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 부족(음주, 도박 등)	3.3	3.4	3.4	3.3	3.4	3.3
개인적인 질환과 신체적 장애	3.1	3.1	3.2	3.1	3.2	3.1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2.8	2.7	2.7	2.6	2.6	2.6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3.3	3.3	3.2	3.1	3.0	3.0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2.9	2.9	2.9	2.7	2.7	2.7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3.2	3.1	3.0	3.0	3.0	3.0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2.8	2.8	2.8	2.7	2.6	2.6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	2.8	2.8	2.8	2.9	2.8	2.8

■ 사회정책과 근로동기의 관계에 대한 인식

-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43.9%가 ‘그렇다’로 응답. 반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 응답자는 약 39.6%였음
  -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 근로에 대한 강조, 근로조건의 지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지될 것으로 추정

〈표 6〉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sup>1)</sup>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그렇다	4.14	4.38	4.10
그렇다	22.26	25.46	21.63
대체로 그렇다	17.50	18.85	17.23
보통이다	16.55	17.46	16.37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16	24.55	26.47
그렇지 않다	9.60	6.76	10.15
전혀 그렇지 않다	3.80	2.54	4.0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1) 이현주 외(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3

## 4.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 소득격차를 비롯해 실업자 및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3.5점 이상으로 그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에 대한 지원지지’는 근로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낮지 않은 상황
-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게으르다는 인식도 높은 상태
- 자녀와 부모 돌봄에 대해서는 가족의 책임에 대한 지지가 높은 수준. 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편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지지는 낮은 상태. 무상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지지나 반대가 뚜렷하지 않음

〈표 7〉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3.7	0.9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3.5	0.9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2.4	0.9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5	0.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3.0	1.0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1	1.1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3.0	1.1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0	1.0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2.1	0.9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4	1.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5	1.0

### ■ 연령별 · 학력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차이

- 연령대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자녀에 대한 가족의 돌봄 지지’, ‘수급을 받는 빈곤층의 게으름’, ‘복지 지원을 빈곤층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반면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생계보장’, ‘무상 대학교육 제공’,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무료’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의 동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연령대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점)

각 항목별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3	3.5	3.6	3.5	3.7	3.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2.8	2.7	2.9	3.1	3.3	3.2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2.9	2.8	3.0	3.3	3.4	3.5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3.2	3.2	3.1	2.9	2.8	2.9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7	2.7	2.6	2.1	2.1	2.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6	3.8	3.5	3.4	3.4	3.3

○ 학력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보면, ‘자녀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 ‘수급자인 빈곤층의 게으름’, ‘복지 지원을 빈곤층으로 한정’, ‘부모부양의 자식책임’에 대한 동의수준은 고학력자 대비 저학력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그리고 ‘근로능력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에 대해서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수준을 보임

〈표 9〉 학력별 국가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점)

각 항목별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3.7	3.7	3.5	3.4	3.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3.3	3.2	3.0	2.7	2.7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5	3.3	3.1	3.0	2.9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2.8	2.8	3.1	3.2	3.1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3.1	3.1	3.0	3.0	2.9

## 5. 정부와 국민의 책임에 대한 인식

### ■ 복지증세 지지도

○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7점 척도에서 4.5점으로 다소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표 10〉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단위: 점)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7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4.5	1.8

○복지증세와 관련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분위별로 좀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 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음. 소득분위별로 비교하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졌음

〈표 11〉 연령대별/학력별/소득분위별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단위: 점)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7점 척도)		평균
연령대	30세 미만	4.1
	30~40세 미만	4.4
	40~50세 미만	4.5
	50~60세 미만	4.7
	60~70세 미만	4.9
	70세 이상	4.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8
	중학교 졸업	4.7
	고등학교 졸업	4.4
	전문대 졸업	4.3
	대학교 졸업 이상	4.6
소득분위	1분위	4.8
	2분위	4.7
	3분위	4.5
	4분위	4.4
	5분위	4.5

○5점 척도로 통일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지지를 비교하여 보면, 두 문항 모두 지지가 높은 경향을 보임

〈표 12〉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지지 비교 (단위: 점)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3.0	0.9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3.2	0.9

■ 정책영역별 정책운영 주체에 대한 인식

○복지영역별로 ‘어떤 주체가 운영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영역별 그 비율은 차이를 보임

〈표 13〉 복지영역별 운영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지지도 (단위: %)

분야	국가	가족,친지	직장	영리 민간기관	비영리 민간기관
교육	78.2	12.3	1.3	3.2	5.0
보건의료	88.1	5.1	1.0	2.5	3.4
아동	61.9	24.0	1.9	4.6	7.6
노인	71.4	15.6	0.3	3.1	9.6
주거	66.9	25.0	1.8	3.7	2.6
고용	67.9	3.8	23.5	3.4	1.4
장애인	86.0	3.4	0.3	2.4	8.0

- 보건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 국가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반면 아동과 주거 복지분야는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 고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며, 노인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기관을 바람직한 주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 재정적인 부담 주체 관련한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특히 장애인복지와 보건의료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
- 주거는 본인을 재정부담 주체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고,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부담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음
- 한편 노인과 아동복지에서는 가족과 친지의 책임인정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고용도 국가가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라고 보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영역과 대비하여 직장의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표 14〉 복지영역별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지지도 (단위: %)

분야	국가	본인	가족, 친지	직장
교육	71.9	20.1	6.7	1.3
보건의료	84.7	10.3	3.0	2.0
아동	65.3	19.8	12.7	2.2
노인	78.4	9.1	12.4	0.1
주거	56.8	38.0	3.7	1.6
고용	65.2	6.8	1.0	27.0
장애인	92.5	2.5	4.3	0.7

6. 시사점

-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의식 이해는 사회정책 기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 사회정책의 방향설정과 관련 유의미한 결과를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음
  - 계층구조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은 높은 것으로 판단. 임금이나 일자리 부족문제를 빈곤 원인으로 이해하는 정도도 낮지 않음
  - 소득격차 · 실업 ·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 건강보장 · 아동보육 ·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의 유지는 중요한 가치로 수용
  - 국민의 책임과 관련하여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집필자 |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문의 | 02-380-8200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